

29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

■ 학습목표

교원소청심사제도에 특징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절차 및 효력과 중앙고충심사청구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 숙지한다.

■ 학습내용

교원소청심사제도의 특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도입배경 및 제도적 의의 및 교원징계법제의 특징 및 교원소청심사청구절차 및 효력과 청구절차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 용어의 정리

- * 재결 :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함
- * 기속력 :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행정심판이나 재판을 일단 공표한 후에 행정청이나 법원이 그 결정이나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
- * 확정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말하는데,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하며,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 * 불가변력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는 힘"을 말하며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 * 형성력 : 형성 판결이 확정된 결과로서, 어떤 법률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

■ 사례 :

<사건의 개요>

P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A는 B지방검찰청이 2008. 1. 11. A를 상해·폭행죄로 구속식하고 2008. 1. 12. B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자, B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2008. 3. 13. A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2008. 7. 25. B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9 2. 18. A를 2009. 3. 1.자로 Y학교로 특별전보하였다. 이에 A는 2009. 2.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09.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A는 ① 이 사건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불이익한 처분임으로 교육공무원징계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② A가 상해·폭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항소심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교사로서의 근무 평정 및 수상 내역,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A가 P 고등학교로 전보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사발령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 되었다.

A의 주장은 타당하며,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쟁점>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을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전보를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의 결말>

A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로서 A가 다투고 있는 경고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행정감사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A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위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는 점, 위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A가 이 사건 특별전보 이전에 정기전보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에 대한 특별전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A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다.

<전문가의 의견>

B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 제1항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된 사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와 같이 상해·폭행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08학년도 B광역시의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 기준제22조제3호호에 의하면 A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로서 A가 다투고 있는 경고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A의 주장대로 경고가 A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행정감사 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A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위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A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는 점, B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위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아니한다.

<본 학습>

1.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 도입배경 및 제도적 의의

가.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정에서의 재판이라는 방식에서의 분쟁해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이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은 42.5%로서 원처분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구제율은 징계의 경우 72.2%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도 34.1%에 달한다.

나.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의 신분 및 권리보장을 통하여 안정적 교육활동 및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인사권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고 교육의 본질과 법령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결국 교원의 권리 보장에 나아가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원징계처분 관련 법제의 특징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들이 교육공무원법 등 국공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처분관련 법제에 비하여 징계의 사유와 양정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징계처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나. 징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규정의 차이

(1)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은 물론 강임, 휴직, 직위해제시에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75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시에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징계시효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①)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2년(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으로 규정되어 있다.

(3) 대통령·장관표창시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4) 징계 외 고충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장(교육공무원법 제49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5) 폐직·과원으로 직권면직 시 기준 설정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설정(국가공무원법 제70조 ③)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6) 폐직·과원시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면직기준 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위해 심사위 구성(국가공무원법 제70조 ④)규정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7) 징계의결 요구시 직위해제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도 중징계 대상일 때만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하지만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다.

(8) 복귀신고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휴직사유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3조)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3. 교원소청심사제도의 특징

가. 교원소청심사제도는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써 교원신분보장을 위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징계권자를 기속하게 하며(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소송제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등에 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제외하고도 인사, 처우상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고충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충처리제도).

나. 그 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징계처분에 관한 불복사건의 재심만이 아니고,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도 같이 다루어 왔고, 또한 대학 교원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도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2005년 1월 27일 이전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첫째, 교원의 근무관계에서 국가 혹은 고용주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그 관계설정의 목적과 업무의 성격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인사상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이다.

둘째, 간접적으로는 행정권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준사법적 절차로 하여 사법화함으로써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한 교원의 권리구제, 임용권자의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사기와 자율적인 책임의식, 능동적·창의적 근무여건을 확보하려는 인사정책상의 배려이다.

라.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소청심사결과에 대한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은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과도 아울러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헌재 2006.4.27. 2005헌마1119).

4. 교원소청심사의 현황

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제기율이 16.8%나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소청 구제율이 40.9%나 더 높고 기타 불리한 처분의 소청 구제율도 17.5%나 더 높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립학교의 원처분이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 징계외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각하율이 46.2%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등 부적법의 이유로 인한 각하도 있겠으나 교원들이 달리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장치가 없어서 각하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소청심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19%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5.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분석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패소 사유를 분석해보면 (1) 법령해석의 차이 또는 법령적용의 잘못, (2) 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 (3) 징계절차의 위법 및 원징계절차의 위법에 대한 판단의 오인 등으로 나타났다.

나. 재량권의 남용 및 일탈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1) 사실오인 및 증거부족, (2)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나타났다.

다.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제 판결에서는 상당수의 판결들이 복수의 사유를 들어 판단을 하고 있다.

라. 패소사유를 분석해보면 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② 법령해석의 차이, ③ 절차의 위법 순으로 건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사유에 관한 패소사유를 분석해보면 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② 사실의 오인, ③ 공적인정 및 정상참작 등의 사유, ④ 목적의 위반 순으로 건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나타나는 사유들이었다.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가. 설치근거

- (1) 관련법률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2) 관련시행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나. 기능

우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교원이 받은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법령을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결정하는 기능과 교육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성과

- (1) 시·도별, 국·공·사립간 징계양정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 (2) 교원이 받은 불리한 처분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였고,
-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개청한 1991. 7. 이후 2007. 8.까지 인용률이 41.2%에 이르고 있다.

7. 소청심사절차 개관

가. 소청심사청구 접수(보정 요구) : 보정요구는 소청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보정이 안 될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다. 답변서 접수 및 검토 : 처분권자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등을 방문하여 사실 조사한다.

라. 심사기일 지정 • 통지한다.

마. 심사 : 당사자를 출석케 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위원들의 신문을 병행한다.

바. 결정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하되 결정의 유형에는 각하, 기각, 취소, 변경, 확인, 이행명령 등이 있다.



사.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결정서는 결정 주문과 이유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한다.

8. 소청심사절차

가. 소청심사청구인

(1) 청구인은 각급학교 교원이며, 국·공·사립 구분없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소청인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인 교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대상으로서의 교원의 범주를 교원지위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원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및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은 교원으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들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해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전문직, 연구직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없고,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자격을 갖춘 교원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경영자, 교원단

체의 추천인 등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 있다.

(2) 청구의 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기타 불리한 처분에는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재임용거부 등이 있다.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하여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나 가혹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진급, 승진, 전보, 전출, 보직,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서는 처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인 계약제 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같은 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규정도 가지고 있다. 이때 소청심사청구는 청구서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4) 청구방식은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우편을 이용할 경우 위 청구기간 내에 도달되어야 하며, 온라인 소청심사청구를 할 경우 입증자료 등은 우편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달되어야 한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5)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법 제9조 제1항).

(6) 피청구인은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 가능하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4조)

(7) 청구의 제기시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접수)된 때이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7항).

나. 사건 배정

심사과장은 청구서 내용 검토 후 담당 사무관을 지정한다.

다. 청구서 검토

청구서를 검토하여 흠결여부 필요적 기재사항, 첨부서류 확인하고,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하여야 하고, 흠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규정 제6조 제1항).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라.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분 송부와 동시에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규정 제5조 제1항).

마. 답변서 접수·검토

제출된 답변서 부분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정 제5조 제3항).

바. 사실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규정 제11조 제2항).

사. 심사기일 지정·통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 통지하여야 한다(규정 제9조 제1항).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정 제9조 제1항).

아. 심사회의를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위원장, 위원, 심사과장, 담당사무관, 담당직원, 당사자 및 증인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사건상정 → 당사자 확인 → 신문 및 진술 → 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의 범위를 살펴보면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규정 제12조).

자. 청구인의 권리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거물 그 밖에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도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차. 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명한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 형성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의 효력을 가진다. 즉 심사위원회

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여,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 변경된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기관이라 할지라도 결정에 오기·착오 등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행정심판법 39조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카. 결정서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타. 결정서 송부

결정서(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파. 행정소송 제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 교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10. 소청심사청구 요령

가. 청구서 작성 요령

청구서는 규정양식은 없으나 작성 '예'에 적시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청구 이유는 처분사유 항목별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간명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나.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 (1) 청구서 2부(정본, 부분 각1부)
- (2)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1부
-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 1부

11. 중앙고충심사 절차

가. 중앙고충심사절차

(1) 중앙고충심사청구

①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중앙고충심사청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의 대상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근무조건이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및 업무량, 작업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인사관리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상문제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와 곤련된 사항을 말한다.

③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시정, 구제, 쟁송의 절차가 각 실정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및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및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및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정체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말한다.

④ 중앙고충심사청구는 서면(중앙고충심사청구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및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⑥고충심사청구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7) 결정서작성 및 송부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고충심사결과처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9) 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리하기

징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규정의 차이는

- (1)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은 물론 강임, 휴직, 직위해제시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75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시에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징계시효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①)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2년(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으로 규정되어 있다.
- (3) 대통령·장관표창시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감경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 (4) 징계 외 고충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장(교육공무원법 제49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 (5) 폐직·과원으로 직권면직 시 기준 설정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설정(국가공무원법 제70조 ③)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 (6) 폐직·과원시 직권면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면직기준 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위해 심사위 구성(국가공무원법 제70조 ④)규정이 있으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 (7) 징계의결 요구시 직위해제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도 중징계 대상일 때만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하지만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다.
- (8) 복귀신고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휴직사유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3조)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소청인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인 교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해서 초·중·고등교육법상의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전문직, 연구직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없고,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 형성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의 효력을 가진다. 즉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여,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그런

데 심사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 변경된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기관이라 할지라도 결정에 오기·착오 등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행정심판법 39조에 의해 심사의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평가하기

문제 1. 교원소청심사청구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청구인은 각급학교 교원이며, 국·공·사립 구분없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즉 소청인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인 교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대상으로서의 교원의 범주를 교원지위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원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4)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전문직, 연구직공무원도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4)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은 교원으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들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관해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국공립 학교 교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전문직, 연구직공무원은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없고,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문제 2. 교원소청심사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4)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문제 3. 중앙고충심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교육공무원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중앙고충심사청구는 서면(중앙고충심사청구서)으로 하여야 한다.

(4) 심사기일의 지정통지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시 기일은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4)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